

손학규, 내년 총선 앞두고 인적쇄신 강조

광주·전남 정치권 '물갈이' 촉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화두가 '혁신과 통합'으로 모아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적 쇄신의 경우, '호남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야권연대와 통합도 광주·전남지역이 주요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국민은)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승리에 도취, 스스로를 바꿔나가지 못하면 패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혁신과 통합"이라며 "제도과 인적 쇄신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속에 우리 자신을 혁신이라는 커다란 바람 속에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대표는 야권통합 및 연대와 관련, "민주개혁진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지와 비전을 갖고 통합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당대첩 승리를 계기로 리더십이 더욱 강화된 손 대표의 강력한 의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명에 따라 인적·제도적 혁신과 야권연대 및 통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내세운 '혁신과 통합'이라는 화두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인적 쇄신과 야권통합의 불꽃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만큼 본선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자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

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요 인적쇄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3선 이상의 다선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물갈이' 여론도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국회의원의 '수도권 진출론'과 함께 그동안 정치적 역량을 보이지 못한 다선 의원들의 '정계 은퇴론'도 부상하고 있다.

야권연대 및 통합의 흐름도 내년 총선에서 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성공한 데다 군소 야당이 서울 및 수도권 양

보를 매개로 호남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성사될 경우, 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최소한 두 곳 이상의 지역구를 양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극심한 혼돈과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적쇄신과 야권통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극심한 혼돈과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3파전'

유선호·강봉균·김진표 의원 출마 선언

민주당의 18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2일까지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3선의 유선호(장흥·강진·영암) 강봉균(전북·군산) 의원과 재선의 김진표(경기·수원·영통) 의원 등 3명.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인 유 의원은 '강한 야당론', 재경부 장관 출신인 강 의원은 '대안 정당론', 경제·교육 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전국 정당론'을 각각 기치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

보개혁의 가치를 더욱 선명히 하고 서민·중산층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강력한 투쟁과 당당한 협상을 통해 정국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에 등 돌린 600만 중도층을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을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대안정당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민생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부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내 계파간 가까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전북의 경우 10여명의 의원들이 강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의한 상황에서 19명의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유 의원에 표를 모아줄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당내에서는 유 의원이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표를 등에 업고 1차 투표에서 2위만 하면 결선에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당 장악력이 커진 손학규 대표의 마음, 즉 '손심(孫心)'의 향배도 관심거리다. 손 대표 측근 의원들은 오는 4일 회동해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예비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오는 7월 15일부터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 후보자인 A씨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협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기소액 벌금 300만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중 전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장성군(제2선거구)에서 전남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한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예비 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오는 7월 15일부터 가능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장성군수 후보자인 A씨에 대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협도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의 기소액 벌금 300만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연찬회 '당쇄신' 격론

소장과 중심 비주류 "주류 퇴진" 촉구에 친이계 "화합도도" 맞서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쇄신 안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이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소장과 중심으로 한 비주류는 친이(친이명박) 주류가 재보선 패배를 초래했다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이계는 당내 권력투쟁을 지양하고 계파화합을 도모하자고 맞섰다. 또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을 요구하고 당·정·청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 책임론=김성태 의원은 "(당을)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만든 주류의 2선 퇴진이 필요하다. 회전문 인사를 배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2선 후퇴하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공감을 얻어달라. 이재오 장관이 특임장관보다 교육장관으로 옮기면

서 공간을 당원에게 옮겨주고 인사를 놓아주는 게 어떨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친이계 핵심인 이근현 의원은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특임장관이 공천을 한 것도 아니잖느냐"며 "친이계 2선 후퇴론은 부당하며 선거 패배는 모든 국회의원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역할론=일부에선 박 전 대표가 당 쇄신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친박계는 반대했다.

이근현 의원은 "친박의 대표인 박근혜 전 대표와 친이계 좌장인 이 특임장관이 당의 공동대표를 맡아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은 "2009년과 2010년에도 당의 쇄신요구가 있었지만

친박 진영에서는 침묵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이 있어야 친박도 있고 친이도 있는 것이 아니다. 갈등 앞에서 침묵하기보다는 이제는 변화를 같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유력주자인 만큼 계파관계를 뛰어넘는 당 쇄신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는 쇄신을 다짐했지만 총론은 모이지 않았으며 계파 간 화합을 외치며 전열 정비로 노력했지만 깊은 평을 받았다. 또 당·정·청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주류를 조준했지만 '솔방망이'였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택시 운행기록계 설치비용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 교통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순수)은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

가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하게 된다.

2009년에 '교통안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일반택시는 2012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고,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교통안전장치 설치비용 부담했던 운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교통사

고 절반 줄이기' 사업으로 사업용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면서도 3118억 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켜왔다"라며 "향후 교통안전장치 부착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운천 한나라 최고위원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

"LH, 전주로 일괄 이전해야"

세계경제포럼 阿회의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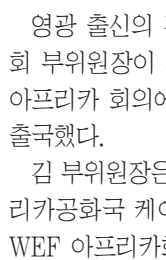
호남 및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운천 전 전 농식품부장관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사 이전 문제와 관련,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일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장벽 허파, 서해안 시대 개막 등을 위해서는 경제력, 재정자립도 등이 뒤쳐진 전주로 LH 분사가 일괄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운천 최고위원



김대식 부위원장



세계경제포럼 阿회의 참가

전복장이터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무어찜

전복장이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이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平日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